

# 北韓의 産業部門別 발전추세\*

崔 載 賢

- |                                       |                            |
|---------------------------------------|----------------------------|
| 1. 문제제기                               | 4. 1950년대 농업집단화와           |
| 2. 주체원리에 입각한<br>내포적 경제발전              | 사회주의 경제의 확립                |
| 3. 해방후 6·25에 이르는<br>시기의 사회주의 기초<br>확립 | 5.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br>의 경제발전 |
|                                       | 6. 計劃과 現實의 乖離              |

## 1. 문제제기

북한경제의 現狀에 대해서 종종 비판과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시장경제에 뒤늦게 接合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한 어려움과 그 성격이 같다. 특히 북한은 인구 2,100만,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미만인 경제소국으로서 국내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석탄과 철광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특히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천연적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조차 갖추지 못한 남한에 비해

\*본 연구는 1990年 文敎部 共産圖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서는 유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경제속에서 오늘날의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있는 것이 틀림없다. 특히 소련이 북한에 공급해 오던 원유의 代價를 근년에 들어서서 달러를 비롯한 硬資로 지급받을 것을 통고한 이래 기왕에 외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북한경제에는 주름살이 더 겹치게 되었다.

북한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그것이 국제시장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는 상품을 생산, 공급하지 못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환영받는 硬資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내다 팔수 있던가, 아니면 품질 좋고 저렴한 공업생산물이나 다량의 농업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상품의 개발, 생산이 북한이 지난 40년간 줄곧 추구해 온 內包的 사회주의 공업화의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주체의 경제원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든실든 세계시장경제에 編入되어 들어가면서 활발한 대외무역을 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를 지녔다 할밖에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적지않은 外債로 시달리고 있으며, 에너지, 운송, 통신, 첨단기술 등에서 落後된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40년간 북한이 이루어 놓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일거에 무시하고 북한체제가 그 나름으로 확보해 온 正當性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사회체제가 역사적으로 걸어 온 길은 그나름의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며, 이 정당성은 그 체제가 안고 있었던 출발 조건과 그 이후의 외적 환경을 냉철히 분석한 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의 低成長이 그 이전 20년 간의 高成長을 송두리째 부인케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나의 사회체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은 결코 경제학적 분석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실사 경제적 분석에 치중한다 하더라도 북한경제가 적어도 70년대 중반까

지 달성한 업적을 소급하여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들어서서 북한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국제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要因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한 검토를 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이모저모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할 때만 그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통계)자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별할 만한 현장경험이 연구자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 다만 흔히 하듯 북한측에서 나온 공식자료들에 의해 북한경제발전의 성과를 살펴보고 남한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다루어 볼 수 밖에 없다.

## 2. 주체원리에 입각한 내포적 경제발전

북한경제는 그 출발부터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內包的成長의 길을 밟았다. 내포적 성장이라 함은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의 힘으로 국내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국내시장을 목표로 생산함을 말한다. 물론 외국과의 교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周邊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무역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냉전체제 아래서의 국가간 우호를 바탕으로 주로 물물교환이나 원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도 적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작다. 이 점은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무역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쓰고 남은 것을 외국과 교환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외국시장을 겨냥해 생산된 것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경제는 국제시장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폐쇄성을 보이기 마련이다.<sup>1)</sup>

1)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8년에 수출 16억불, 수입 28억불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게다가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일체의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까지도 자체조달하는 자립경제의 원칙을 견지해 왔다. 초창기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업선진국가들로부터 발전된 기술을 흡수해 가기는 하였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술을 자체개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러한 자립경제의 원리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활기반과 생산시설이 파괴당한 적이 있는 나라로서는 지켜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댓가로 세계시장으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8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인 낙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3. 해방후 6·25에 이르는 시기의 사회주의 기초 확립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각 정당, 사회단체, 지방인민위원회 등을 망라하여 북조선임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임시위원회는 민족부르조아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인사를 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지향하고 있었다. 각계각층을 망라한 통일전선의 결과 구성된 인민위원회는 해방 이후의 권력공백을 메꾸는 유일무이의 국가권력이었다. 이 위원회는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8월에는 중요산업 국유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기초를 닦는 외에도 6월에 노동법령을 반포하고, 7월에 남녀평등권법령을 시행하는 등 일련의 민주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국내기반이 아직 취약하였던 집권세력이 일련의 정책개혁을 통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1979년 이래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資料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東京, 1990, p.367. 한편 국토통일원 자료로는 이 해에 북한의 무역거래 출량이 이보다 좀 많은 52억불로 나타나 있다. 89년말 북한의 총외채규모는 67억8천만불에 이른다고 한다. 국토통일원, 통일백서 1990, p.237

## (1) 토지개혁

그 가운데서도 토지개혁은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토지를 혁명적 방식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생산농민 가운데서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립한 결정적인 조치였다. 1945년 현재 북한 농가총수의 4%에 불과한 4만4천호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고, 총농가호수의 56.7%를 점하고 있었던 빈농은 겨우 5.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소작제는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큰 테두리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러한 극심한 土地偏重所有로 나타난 것이다.<sup>2)</sup>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이 반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개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1. 일본인 지주, 민족반역자 등의 토지뿐만 아니라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와 계속 소작되는 토지, 그리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無償沒收하여 머슴, 토지가 없거나 적은 실제 경작자들에게 無償分配한다.

2.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와 관계 있는 일체의 부채, 부담을 면제하고, 토지몰수의 대상이 된 지주에 대한 일체의 부채를 취소하며, 지주 소유의 가축, 농기구, 주택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한다. 몰수한 건물의 일부는 학교, 병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용한다.

3.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를 매매, 저당, 임대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일본제국주의 및 토지몰수의 대상이 된 조선인 지주의 파수원을 몰수하여 지방인민위원회가 보유한다. 농민소유의 작근 삼림을 제외한 일체의 삼림과 토지몰수대상 지주들이 소유한 관개시설을 몰수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관리하에 둔다.

5. 몰수한 토지는 가족원 숫자와 노동능력에 따라 균등분배함을 원칙으

2)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 (평양, 1983), p.71-723. 高承孝, 「現代朝鮮經濟入門」, (東京, 新泉社), 1989, p.27에서 인용.

로 한다. 즉 18-60세의 성년남자와 18-50세의 성년여자는 1점, 15-17세의 청년은 0.7점, 10-14세의 소년은 0.4점, 9세 이하의 아동은 0.1점, 61세 이상의 남자와 51세 이상의 여자는 0.3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배분하였다.<sup>3)</sup>

이러한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1950년 남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이 유상몰수, 유산분배의 원칙을 지켰던 것과는 매우 다른데, 북한에서 이와같은 혁명적 토지분배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군사력이 임시인민위원회의 혁명적 조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物理力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박약하였던 당시의 북한주민에게 이러한 토지분배는 혁명적인 조치였으며, 이 조치에 따라 지주와 친일파세력이 약화되고, 광범한 생산농민 사이에서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을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당시 몰수된 토지의 내역을 보면 422,646호로부터 몰수된 토지가 모두 100만 325정보였는데 그 가운데 경지면적은 983,954정보였고, 과수원은 2692정보였다. 그 분류내역을 밝힌 <표 1>을 보면 일본인 및 일본 국가 토지가 11.3%, 민족반역자 및 도주자 토지가 1.3%였으며,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 토지는 23.8%, 전부 소작을 주는 자의 토지는 26.3%,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자의 토지는 35.8%, 성당, 승원, 종교단체의 토지는 1.5%였다. 분배된 토지 981,390정보의 내역을 보면 고용농민에게 2.2%, 토지없는 농민에게 60.3%, 토지 적은 농민에게 34.6%, 이주한 지주에게 1%로 되어 있고, 인민위원회 보유지는 1.9%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분배된 토지는 당시 북한 총경지면적의 53%에 해당하였다. 이 토지개혁은 그 이후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협동농장화의 기초를 이룬다.

3) 高承孝, 위의 책 p.29-29

## (2) 重要산업의 국유화

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 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공장,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채신, 은행,

〈표 1〉 토지개혁에서의 몰수 및 분여 대상별 구성(%)

몰수한 토지	100.0
일본인 및 일본 국가 토지	11.3
민족반역자 및 도주자 토지	1.3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 토지	23.8
전부 소작 주는 자의 토지	26.3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자의 토지	35.8
성당, 승원, 종교단체의 토지	1.5
분여한 토지	100.0
고용농민에게	2.2
토지 없는 농민에게	60.3
토지 적은 농민에게	34.6
이주한 지주에게	1.0
인민위원회 보유지	1.9

〈자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1946-50 국립출판사, 평양, 1961, p.60

상업, 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 수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 조치를 통하여 전체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034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전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 (3) 私的資本主義 경제형태의 감소

상업망을 살펴 보면 1946년 상업망 총수 951개소중 국영상점 1개소, 협동단체 상업 950개로서 이미 이 시기에 사적인 상업망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음을 본다. 이후 국영상업망의 비중이 점점 증대해 갔음을 우리는 북

한층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다. 즉, 1949년에 와서는 전체 상업망수 3365개소 가운데 국영상업이 1371개소로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구성비는 1960년에 오면 66%로 상승한다.<sup>4)</sup>

〈표 2〉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

인민경제부문별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수	인민경제부문별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	
전력공업부문	47	경공업부문	297
연료공업부문	66	농업및 임업부문	55
유색금속부문	207	어업부문	74
흑색금속부문	83	운수부문	13
화학공업부문	88	담배, 소금, 양주, 인삼가공	6
건축공업부문	62	기타	36

〈자료〉 손진후 : 산업국유화 경험, 1985,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p. 97.

사회총생산액의 소유형태별 구성을 〈표 3〉에서 보면 총생산액 가운데서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1946년 19.1%에서 1949년 43.7%로 급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1959년에 100%에 달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적 생산이 50년대에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바뀔을 이 표에서 볼 수 있다. 1946년에만 해도 60.9%의 비중을 점하고 있던 소상공 경제형태가 1949년에는 44.2%로 줄어들고, 1959년에는 아예 소멸해 버렸는데 이는 일체의 생산활동을 국영이든 협동 형태든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대에 따라 사회총생산액은 1946년을 100으로 할 때 1949년에 219로서 3년만에 무려 119%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북한 통계자료에는 나와 있다. 이 수치는 1960년에 이르러서는 797로 증가하는데 이는 14년만에 무려 697%의 획기적인 생산증대를 의미한다.<sup>5)</sup>

4) 인민경제발전통계집 1946-60, p.135

5) 같은책 p.21

공업총생산액의 증대는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1947-49년 사이에는 49.9%, 1954-56년 사이에는 41.7%, 1957-60년 사이에는 36.6%, 1954-60년 사이에는 39.0%가 늘어났다. 1947-49년 사이에 생산수단 생산은 55.3% 늘어났고, 소비재생산은 42.3% 늘어남으로써 이 시기 공업화의 전력이 종전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비재를 풍부히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sup>6)</sup> 이와같은 생산증대 덕분에 제2차세계대전 종료에 따른 일본인 기술자들의 怠業과 직장이탈로 빚어진 생산의 停滯現象은 시정될 수 있었다.

〈표 3〉 사회 총생산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소유형태별 사회 총생산액						
년 도	총 계	사회주의 경제형태	그 중		소 상품 경제형태	사자본주의 경제형태
			국 영	협 동		
1946	100.0	19.1	18.9	0.2	60.9	20.0
1949	100.0	47.6	43.7	3.9	44.2	8.2
1953	100.0	50.5	45.1	5.4	46.6	2.9
1956	100.0	89.0	60.2	28.8	8.7	2.3
1959	100.0	100.0	68.1	31.9	-	-
1960	100.0	100.0	69.1	30.9	-	-

〈자료〉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1946-60, p.23

그러나 북한측이 스스로 일으킨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공업생산기반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식량생산, 주택, 학교 등 주민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이 태부족인 상태가 벌어졌다. 북한측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체제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서 혼란에 빠진 남한에 비교할 때 북한은 어느 정도 체제안정을 이루었고, 통치조직이 비교적 완비된데다가 소련의 군사장비 원조로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남한에

6) 같은책 p.40

비해 북한의 체제정비가 앞서 갔고, 공업화와 사회의 조직화 역시 한 발 앞서 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1950년대 농업집단화와 사회주의 경제의 확립

1950년대 북한경제의 발전은 농업집단화를 토대로 한 공업화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농업협동화는 1953년에 총경지면적의 겨우 0.6%만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1955년에는 48.6%, 1958년 8월에는 100% 완료되었다. 종료될 당시 협동농장 가입 농가는 100만호가 넘었으며, 이 수는 당시 북한 농가 총수에 해당하였다.(<표 4> 참조)

〈표 4〉 농촌 경리의 협동화

(년말 현재)

	농업 협동 조 합 총계(개소)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된 농호 수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된 경지 면적	
		농호 수(호)	총농가 호 수에 대한 %	경지 면적 (천 정보)	농민 경리 총 경 지 면적에 대한 %
1953	806	11,879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8	576	30.9
1955	12,132	511,3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958 (11월)	3,843	1,055,015	100	1,791	100

【주】 협동화의 완성은 1958년 8월 말임.

〈자료〉 조선중앙년감 1959, p.330

협동농장이 확산되면서 그 규모도 커져서 1953년에는 협동농장당 평균 농가호수가 15호, 평균 경지면적이 14정보이던 것이 1958년 8월에는 각각

80호, 137정보로 늘어났다.<sup>7)</sup> 이렇듯 단위 협동농장의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농업의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고, 생산, 출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례하여 협동조합 농가 1호당 분배 몫은 1956년 알곡 1616kg으로부터 1958년 1826kg으로 늘어났고, 저류는 357kg으로부터 501kg으로, 현금은 95원으로부터 203원으로 증대하였다.<sup>8)</sup> 1950년대 북한경제는 전후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1954-56), 5개년계획(1957-61) 등을 거치면서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 갔다. 50년대에는 공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농업도 1949년을 100으로 할 때 1958년의 시점에서 167로 성장하였다. 국가 기본 건설투자액은 1949년을 100으로 할 때 1958년에 512로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활발했음을 <표 5>에서 볼 수 있다. 50년대 공업성장에 있어서는 생산수단 생산(A부문)보다 소비재 생산(B부문)이 조금 앞서 간 것을 이 표에서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전쟁후 인민의 생활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덕분으로 보인다. 상품유통은 1949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58년에 228로 늘었다. 이러한 통계표에서 보듯 1949-58년에 이르는 10년간 공업은 연평균 20% 이상, 농업은 5%정도, 건설부문은 무려 10년간 400% 이상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그림 1>에 잘 도해되어 있다.

1950년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100% 달성되었다. <표 6>에서 보듯이 국민소득 가운데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이 1953년에 45.6%였으나 1958년에는 99.9%로 증가하였다. 공업, 농업, 소매상품유통 등도 모두 100% 사회주의화하였음을 볼 때 1950년대라는 시기는 그 이후 사회주의 경제를 위한 토대를 굳힌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공업경영형태는 국영경리가 늘어나는 추세이면서도 1958년 수준에서 아직도 협동경리가 12.2%였고, 小商品經濟狀態는 0.1%의 미미한

7) 高承孝, p.63

8) 내각부수상 기중옥 대의원의 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 실행총화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2집, 1988, p.826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sup>9)</sup> 북한은 농업을 집단화된 협업농장 형태로 묶어 나가고, 공업과 상품유통은 기본적으로 국영으로 해 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업화가 계속 추진된 결과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가운데 공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49년의 47%로부터 1956년에는 60%로 증대하였다.<sup>10)</sup> 공업의 부분별 구성으로 볼 때는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업이 1949년 8.1%로부터 1959년 20.4%로 늘어남으로써 생산수단 생산부분이 상대적으로 高成長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일상소비재와 관련되는 방직공업은 같은 기간에 6.0%로부터 17.4%로, 식료 및 기호품공업은 7.8%로부터 15.6%로 늘어남으로써 50년대 소비재 산업이 적지 않게 발전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11)</sup>

〈표 5〉 인민경제발전의 기본지표

	1949	1951	1953	1956	1957	1958
국민소득	100	...	70	146	200	285
공업 총 생산액	100	47	64	183	264	362
그중 생산수단 생산(A)	100	33	42	171	250	337
소비재 생산(B)	100	65	99	208	297	414
농업 총 생산액	100	...	76	106	131	167
각종 운수 형태에 의한 화물 순환	100	20	59	129	153	194
그중 철도 운수의 화물 순환	100	20	53	126	149	185
상품 유통 총액(개인 상업 포함)	100	29	64	119	187	228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종업원 수	100	62	102	143	149	174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100	74	135	396	407	512

〈자료〉 조선중앙년감 1959, p.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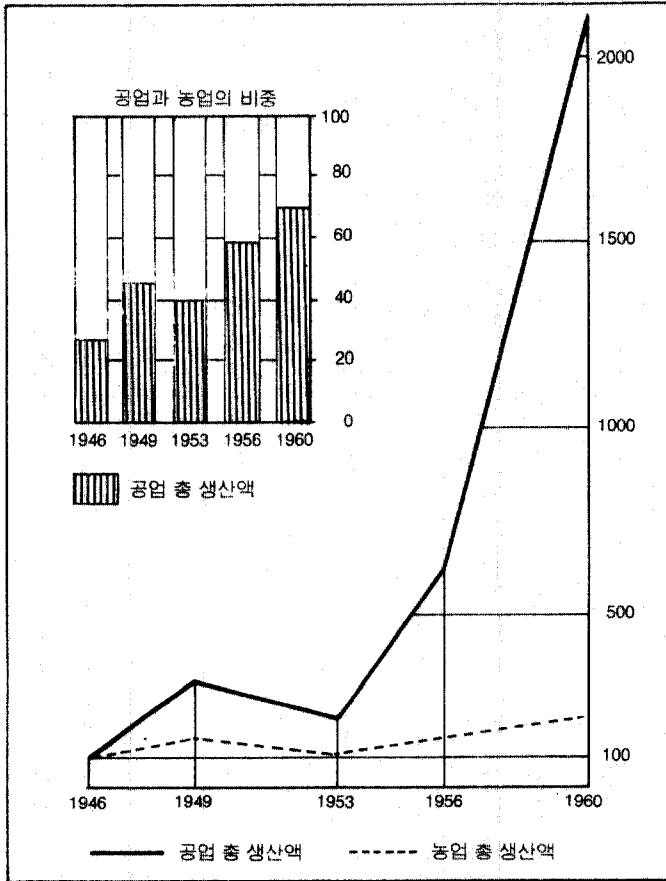
50년대 공업화로 인해 인구의 직업별 구성도 상당히 변화되었다. 우선 총인구를 보면 1946년말 925만 7천명이었던 것이 1960년말에는 천7십8만

9) 조선중앙년감 1959, p.324

10)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2집, p.794

11) 위의책 p.806

9천명으로 14년 동안에 17%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딘 인구증가를 보였다. 특히 1949년말 인구가 962만2천명이었던 것이 1953년 12월1일에



<자료> 인민경제발전통계집 1946-60

<그림 1> 공업 및 농업 총 생산액의 장성(1946년에 대한 %)

는 120만명이 준 849만1천명으로서 전쟁의 혹독한 영향을 인구추이에서 곧 느낄 수 있다.<sup>12)</sup>

〈표 6〉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

	1946	1949	1953	1956	1957	1958
국민 소득	14.8	44.5	45.6	85.8	93.5	99.9
공업 총생산액	72.4	90.7	96.1	98.0	98.7	99.9
농업 총생산액 (협동 조합원 부업 경리 포함)	-	3.2	8.0	73.9	88.2	100.0
소매·상품 유통액	3.5	56.5	67.5	87.3	87.9	99.9

〈자료〉 조선중앙년감 1959, p.323

한편 인구의 직업별수성을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해방직후인 1946년에는 74.1%가 개인농민이었으나 1960년말에는 이들이 모두 집단화된 뒤에 농업인구의 비중이 44.4%로 줄어들었다. 그에 비해 노동자는 같은 기

〈표 7〉 주민의 사회 그룹별 구성

	1946년말	1949년말	1953년 12월 1일	1956년 9월 1일	1959년 12월 1일	1960년 말
총 수	100	100	100	100	100	100
노동자	12.5	19.0	21.2	27.3	37.2	38.3
사무원	6.2	7.0	8.5	13.6	13.4	13.7
농업 협동 조합원	-	-	-	40.0	45.7	44.4
개인 농민	74.1	69.3	66.4	16.6	-	-
협동 단체 가입 수공업자	-	0.3	0.5	1.1	3.3	3.3
개인 수공업자	1.5	0.8	0.6	0.3	-	-
기업가	0.2	0.1	0.1	-	-	-
상인	3.3	1.7	1.2	0.6	-	-
기타	2.2	1.8	1.5	0.5	0.4	0.3

〈자료〉 조선 중앙년감 1961, p.321

12) 조선중앙년감 1961, p.321

간에 12.5%로부터 38.3%로 늘어났다. 사무원도 역시 같은 기간에 6.2%로부터 14.4%로 증가하였다. 상인과 기업가, 개인수공업자는 통계상 소멸하였으며, 협동단체 가입 수공업자는 1960년대말에 3.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직업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북한의 50년대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며, 대략 50년대 말에는 북한전역에 사회주의 경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노동자와 사무원의 평균임금은 1953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58년에 245로 늘어났다.<sup>13)</sup>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학교 총수도 1946-47년의 2,731개로부터 1960-61학년도에는 8,481개로 늘어났으며, 대학은 해당 기간에 4개로부터 76개로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64개에서 4,470개로 늘어났다.<sup>14)</sup>

## 5.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경제발전

북한의 경제발전은 다음과 같은 中長期 국가계획에 의해 60년대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 ㄱ. 제1차 7개년계획(1961-67/70)
- ㄴ. 국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6개년계획(1971-76)
- ㄷ. 제2차 7개년계획(1978-84)
- ㄹ. 제3차 7개년계획(1987-93)

북한의 자료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은 매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해 왔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제3차 7개년계획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북한측의 자료에 의해서 각시기별 경제성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50년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풍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만 6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공업생산이 그전

13) 조선중앙년감 1959, p.324

14) 조선중앙년감 1961, p.347

언제에 비해 몇 % 정도 늘어났다는 식으로 증가 추세만 밝히고, 실수는 상세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통계수합 방식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대외발표의 방침에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다.

### 가. 제1차 7개년계획(1961-67/70)

제1차 7개년계획에서는 계획기간중에 공업생산 3.2배, 농업생산 2.4배 증대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1962년 카리브해의 위기 및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박에 의해 목표가 수정되어 특히 국방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는 7개년계획을 3년 연장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제1차 7개년계획은 당초의 목표성장률 연간 18.0%가 12.8%로 떨어지는 부진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10년 동안에 대부분의 목표치에 도달하였고, 당시 국제비교를 해보면 이 시기의 연평균 12.0% 성장이 결코 낮은 성장률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제1차 7개년계획의 수행실적을 백분율비교로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제1차 7개년계획의 수행실적(%)

	계 획(1961-67)	실 적(1961-70)
국민소득	270	-
공업생산고	320	330
생산수단	320	370
소비재	310	280
평균적 성장률	18.0	12.8
곡물생산고	158-184	150*
노동자·직원의 실질임금	170	-
농민의 실질소득	200	180**

\* 1968년 추계 \*\* 1968년 현재

<자료>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결정 및 제5차 대회 김일 부수상의 보고

고승효, 1989, p.104에서 인용

이 시기 공업화 덕분으로 사회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9년에 74%까지로 증대하였다.<sup>15)</sup> 1966년에는 농업현물세를 완전 폐지시켰다.

공업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그 유명한 大安의 사업체제가 이 시기에 입안되어 그 이후 북한사회주의 공업관리체제의 지침이 되었다. 이 대안의 체계라는 것은 1961년 12월 16일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집약한 것으로서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구축한다.
2.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주는 자재공급 체계를 세운다.
3. 후방공급체계를 새로 편성한다.
4. 기업관리 운영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체계를 세운다.<sup>16)</sup>

또한 이 시기에 노동력 동원체제로서 이른바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이 유행되었다. 북한의 자료들은 이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를 적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수정주의, 좌경모험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나쁜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도 잘 할 수 없습니다.”<sup>17)</sup>

이러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불충분하여 노동력 동원에 애로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이라는 구실 아래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지배를 확대해 가는 과정이 이 천리마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15) 조선중앙년감 1961, p.322

16)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데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p.101-1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7) 위의책, p.331-322

### 나. 6개년계획(1971-76)

6개년계획에서는 그동안의 공업화를 토대로 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차이,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해소하고 여성을 과중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 이른바 국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깃발로 내들었다. 그 가운데 국방력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전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sup>18)</sup>

6개년계획의 수행실적을 다음 <표 9>에서 보면 공업생산은 1970년을 100으로 할 때 1976년에는 무려 250으로 증대하였으며, 곡물수확고는 1976년에 800만톤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표 9> 6개년계획의 수행실적(1970=100)

	계 획(1976)	실 적(1976)
공업 총 생산고	220	250
생산수단 생산	230	260
소비재 생산	200	240
공업의 연평균 성장률	14.0	16.3
곡물 총 수확고	700-750만톤	800만톤
세대당 실질소득:		
노동자, 사무원	150	170
농민	160	180

<자료>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 및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대회에서의 리종욱총리의 보고 “6개년계획 수행총화와 인민경제발전 7개년(19-84)계획에 대하여”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4권 p.94

6개년계획이 끝난 1976년에 북한은 기계설비 국내 자급률 98.1%를 보였으며 강철 400만톤, 시멘트 800만톤 이상이 생산되었다.<sup>19)</sup>

18) 김일성 저작집 제5권 p.223

19) 조선중앙년감 1977, p.198-200. 정무원총리 리종욱의 보고 p.95-102. 1976년에는 알곡생산에 850만톤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학은 1970년의 129개로부터 1976년에는 155개로 크게 늘어났다.

## 다. 제2차 7개년계획(1978-84)

제2차 7개년계획에서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각부문별 발전계획을 보면 <표 10> 및 <표 11> 과 같다.

&lt;표 10&gt; 제2차 7개년계획의 주요 경제지표(%)

	1978-1984
공업 총 생산고	220
생산수단 생산	220
소비재 생산	210
공업의 연평균 성장률	12.1
곡물수확고	116
철도 화물 수송량	170
자동차 화물 수송량	400
국민소득	190
소매상품 유통고	190
노동생산성	
공  업	170
농  업	160

<자료>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리  
중옥총리의 보고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4집  
107-123

한편 제2차 7개년계획의 수행실적을 <표 12>에서 보면 국민소득은 목표치 190에 못미치는 180에 머물렀고, 다른 목표치는 대체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시기 공업성장은 전시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어 연평균 12.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곡물수확고는 1979년에 900만톤, 1984년에 1000만톤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20)</sup>

20) 조선중앙년감 1980, p.4, 1985년 p.217

〈표 11〉 제2차 7개년계획의 주요 경제목표

	1984	1976년비(%)
전 력	560-600억 kwh	197-215
석 탄	7000만-8000만톤	140-160
강 철	740-800만톤	185-200
비철금속	100만톤	-
기계가공품	500만톤	-
화학비료	500만톤	-
시멘트	1200-1300만톤	150-163
직 물	8억 미터	133
수산물	350만톤	218
간척지개발	10만정보	-

〈자료〉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주석의 연설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 제4집 p.53

〈표 12〉 제2차 7개년계획 수행실적

국민소득	190	180
공업 총 생산고	220	220
생산수단 생산	220	220
소비재 생산	210	210
공업 연평균 성장률	12.2	12.2
곡물 총 수확고	1000만톤	1000만톤
철도 화물 수송량	170	180
소매상품 유통고	190	190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소득	-	160
국민의 실질소득	-	140

〈자료〉 제2차 7개년계획의 수행에 관한 조선중앙통제국의 보도(1985. 2)  
고승효 1989, p.117에서 인용

1984년 기준으로 북한은 500만톤의 화학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정보당 2톤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8억 미터의 천생산량, 360만톤

의 수산물생산 등을 자랑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 트랙터는 1.5배, 자동차는 1.3배 증가하였으며, 전기기관차 견인비중은 67%에서 88.3%로 늘어났다. 일용품생산은 2.5배, 식료품 및 기호품생산은 2.2배, 화학섬유 1.8배, 합성수지 2.4배 등으로 늘어났다.<sup>21)</sup>

### 라. 제3차 7개년계획(1987-93)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져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간중에 다음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

<표 13>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

사회 총 생산액	180
국민소득	170
공업생산	190
생산수단 생산	190
소비재 생산	180
기계제품 생산	250
농업생산	140
철도 화물 수송량	160
자동차 화물 수송량	260
병원침대수	130
예방치료집단수	120
지방공업생산	250

<자료>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중앙연감 1988, p.44-55

이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대로 수행된다면 북한의 곡물생산은 1500만 톤, 그중 벼는 700만톤, 강철생산은 1000만톤, 석탄생산 1억2천만톤, 유색 금속생산 170만톤, 시멘트생산 2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1) 조선중앙연감 1987, p.246 이하 참조

30만톤의 간척지를 개간하고, 수산물은 1100만톤에 이르며, 매년 15만-2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기간공업과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 외에도 전자공업, 전자계산기 생산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평양동지에 로봇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공업생산은 연평균 9.6%, 농업생산은 연평균 4.9%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시기에 비해 성장의 템포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sup>22)</sup> 또한 이러한 목표조차도 전자, 컴퓨터, 자동화 등에 관한 첨단기술과 에너지원의 안정공급을 전제로 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기술과 에너지원, 특히 석유를 갖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국제경제질서에 평화적으로 편입되어 활발한 교역관계를 열지 않는 한 목표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6. 計劃과 現實의 乖離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북한의 경제가 1953년 휴전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50년대 협동농장화를 통해서 농업생산을 안정시키고 이어서 공업을 고속성장시켜 왔다. 적어도 60년대말까지 이러한 고속성장이 계속됨으로써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성립 당시의 농업국가적인 면모를 탈피하고 공업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속에 공업국가로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공업화에 이르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 북한의 공업화는 상대적으로 앞섰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공업화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80년대 이후로는 자본주의 세계에 비할 때 상대적인 낙후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은 식량조달에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1991년 들어서서 개시된 남북적교역에서 시멘트를 남으로 수출하는

22) 조선중앙년감 1988, p.44

대신 쌀을 수입해 가는데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식량에 관한 통계 하나만을 놓고 볼 때도 공식문헌과 현실 간의 괴리가 느껴진다. FAO의 1988년 생산연감에 보면 북한의 당해년도 곡물 생산은 무려 1187만2천톤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중에서 쌀의 생산은 635만톤이다.<sup>23)</sup> 이 통계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북한에 쌀 부족 현상은 있을리가 없다. 인구가 두 배나 되는 남한에서 1988년도에 쌀이 6백만톤 생산되었는데, 이 시기에 남한에서는 쌀이 남아돌고 있었다.<sup>24)</sup> 한편 국토통일원 자료에 따르면 1988년도에 북한 곡물생산은 총 521만톤에 불과하고, 그중 쌀 생산량은 209만톤으로 추산된다.<sup>25)</sup> 통일원측의 이러한 추산은 곡물 총량에 있어서 FAO 통계의 2분지1에 불과하며, 쌀 생산량은 3분지1로 내려 잡고 있다. 주민의 생활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곡물통계가 이렇듯 엄청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결론을 내기가 두려워진다.

만약 북한의 곡물생산 통계가 과장에 가득찬 것이라면 지금까지 보아 온 경제발전애 관한 일체의 통계를 믿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북한경제의 성장은 오직 통계만의 허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남한당국의 통계치가 지나치게 축소조정된 것이라 하면 이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교묘한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할 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가 지난 40년 동안 停滯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북한경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60년대 말까지는 남한보다도 여러 부문에서 앞선 흔적이 보인다. 공업의 基盤은 비교적 탄탄해 보이며, 농업부문 역시 인구를 부양할 만큼은 발전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북한의 지배집단이 장기에 걸쳐서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3) 財團法人, テゾオペレヌ(Raelio press), 北朝鮮 現況, 1990, 東京 p.105

2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통계요람, 1990, p.98

25) 국토통일원, 통일백서, 1990, p.232

그러나 70년대 이후 남한경제의 발전이 빠른데다가 세계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의 늪을 헤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북한경제에도 차차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두말할 여지없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첨단 군사장비 경쟁 역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좀먹어 들어 간 중요한 害惡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전설에서 추구해 온 주체의 원리가 세계시장으로부터 단절된 폐쇄모델을 강요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경제는 남한경제에 비해 그 성장이 뒤지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내수시장이 좁은 북한으로서는 내포적 성장전략이 아무리 도덕적인 설득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자신들의 경제성장에 몰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한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탄을 제외하고는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북한으로서는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유공급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국제원유시장으로부터 경화로 이를 사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은 뒤늦게서나마 북한에 전자화, 자동화 쪽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 부분의 기술과 시장이 주로 서방측에 있기 때문에 서방측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계획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합병법을 제정하고 서방측과 제휴하려 하지만 외교, 군사문제가 가로막혀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내 농업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고,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시장경제 질서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잠재력은 두 개의 經濟單位인 남북한이 서로 補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